

민주화운동 역사교과서에 어떻게 서술할까

: 역사교과서 서술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현종철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민주화운동 역사교과서에 어떻게 서술할까

: 역사교과서 서술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현 종 철

한국민주주의연구소

01

들어가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9월 15일 국회에서 <<역사교과서의 민주화운동 서술분석과 민주주의적 관점의 재구성 방안에 대한 공청회>>(설훈의원실, 유은혜의원실과 공동 주최)를 개최하였다. 이 공청회는 연구소가 2017년 4월부터 7월까지 김정인교수(춘천교대) 연구팀에게 의뢰하여 진행한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교과서 분석과 서술방향' 연구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연구팀은 공청회에서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연구결과서를 마무리했다. 이 글은 '연구결과서'를 기반으로 민주주의적 관점에서의 역사교과서 서술 정책과 민주화운동 역사의 서술방향을 중심으로 요약, 재구성하였음을 밝힌다.

연구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초중고 역사교과서의 현대사 서술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여전히 국정제를 유지하고 있는 초등 교과서 2종, 처음 검정 교과서 형태로 발행된 2007 교육과정 시기 중학교 역사교과서 6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 2009 교육과정 시기 중학교 교과서 9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이 그 대상이다. 이 작업을 통해 부당하게 강제 수정되었거나, 다른 이유로 역사학계의 연구나 국민의 상식과 어긋나는 부분을 찾으려 하였다.

그러나 연구팀은 작업이 잘못된 서술을 확인하는데서 그치지는 않았다. 역사왜곡이 이루어지는 형태는 다양하여, 마땅히 써야할 내용을 쓰지 않거나 부적절한 프레임을 통하여 맥락을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 역사교과서들에는 오래 동안 답습하여 마치 실제인 양 보이지만 기실 따지고 보면 박정희의 역사인식을 반영한 언어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작업은 독재의 정권 정당화가 아니라, 민주주의·민주화운동의

역사란 관점에서 교과서를 들여다보며, 훼손된 지점을 발견함은 물론 교과서 서술의 프레임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자 하였다.

이 일은 적극적으로 민주주의 역사·민주화운동사의 교육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일, 나아가 민주적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현대사 서술의 방향을 탐색하는 일로 이어질 것이다. 이번 연구가 개별 교과서 분석에 그치지 않고, 교과서 서술로 드러난 역사인식의 프레임-특히 민주주의·민주화운동 인식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새로운 교재 구성방식을 탐색한 것은 이 때문이다.

02

민주화운동의 정의 검토

‘민주화운동’이란 단어는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유신독재를 반대하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싸우던 운동가들이 이 용어를 가끔 사용하였다. 이 단어는 1983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 탄생한 이후 좀 더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개발독재에 맞선 운동의 주체들은 여전히 민중항쟁, 민중운동, 변혁운동, 민족민주운동이란 단어를 즐겨 썼다. 이 단어는 1988년의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 1995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거치면서 점차 확산되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과거청산과 민주화 기념 및 보상 관련 활동이 본격화할 때 점차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이같은 현실은 민주화운동의 정의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민주화운동”이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¹⁾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²⁾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
(개정 2013.5.22.)

2)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민주화보상법) 제2조

시도 단위에서 조례를 통해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일도 많이 있다. 이 조례들에서

민주화운동을 정의하는 방식도 대체로 이와 유사한 방식이다.

두 법에 따르면, 민주화운동은 ‘①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 ②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③ 항거’를 가리킨다. 여기서 권위주의 통치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한 통치를 뜻하며, 항거는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 뿐 아니라 국가권력이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를 포함한다.³⁾

민주화보상법은 보상할 민주화운동을 1964년 이후로 정하였으나, 기념할 민주화운동을 적시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민주화운동의 시작점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정하였다. 자치단체 차원의 관련 조례 역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시작점을 정하였다. 민주화운동을 헌법적 가치와 관련짓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저항과 신장을 위한 활동으로 정의한데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다만 이 법령들은 기념할 민주화운동의 종점에 대하여는 명시하지 않았다. 민주화운동을 권위주의적 통치와 관련지어 이해할 때와 헌법적 가치의 실현 혹은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킨 활동에 주목할 때가 다를 것이다.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항거로 민주화운동을 정의할 때 결과적으로 민주화운동의 범주 밖으로 밀려나는 저항 사례들이 발생한다. 남북의 화해협력을 도모하려던, 넓은 의미에서 통일운동은 기념이나 보상의 대상으로서 민주화운동 범주 밖에서 정의되기 쉽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 운동 역시 배제되기 쉽다. 과거 독재정치가 합법적 영역의 저항을 극단적으로 억압하였기 때문에, 1970년대나 1980년대는 다양한 형태의 비합법 조직이 구성되어 급진적인 방식으로 투쟁한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도 민주화운동의 범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데 앞장 섰던 자칭 산업화 세력 중 상당수는, 그때도 급진·좌경·용공 등의 단어를 동원하여 민주화운동을 불온시하였고, 여전히 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넓은 시대와 혁명적으로 단절하지 못한 결과, 민주화운동을 반독재 민주화운동 중심으로 기념할 때 빛어지는 한계다.

그러나 두 법에서 정의한 민주화운동은 법률로서 기념하거나 보상할 때의 범위를 설

3)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이 시행령에는 “다만,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여 항거의 대상으로 국가권력으로 제한하였다.

정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기념하고 보상하지 않는다 하여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게다가 이 법에서조차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나 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이란 방식으로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펴낸 『한국민주화운동사』에서는 민주화운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민주화운동 하면 반독재투쟁이 쉽게 떠오른다. ...요컨대 억압으로부터 자유와 자율을 확대시키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운동, 냉전체제·진영논리를 벗어나 민족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운동이나 통일운동, 민중의 생존권과 더 나은 삶을 위한 투쟁은 어느 것이나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있다.⁴⁾

또한 민주화보상법에서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국한하지 않고 심의회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면 보상할 수 있다고도 하였으며, 실제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이들은 반독재 민주화운동가의 범위보다 훨씬 넓다.

우리 교과서들은 절차적 민주주의·정치적 민주주의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주로 개념화하였다. 민주화운동 역시 정의롭지 못한 권력에 맞선 반독재 투쟁 정도로 형상화하였다. 바로 이 때문에 노동운동을 비롯하여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 나아가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확장하려는 운동은 충분히 기술하지 않았다. 제3세대 인권의 제도화 혹은 일상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부분은 아예 민주화운동의 범주 밖에 있었다. 그것은 민주화운동의 진정한 가치를 왜곡하고 축소하는 일이며, 오늘의 민주화운동사 학습을 통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가려는 교육적 실천과 화석화된 민주화의 역사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빚고 만다.

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화운동사』1, 돌베개, 2008. pp14-15.

03

역사교과서의
서술 분석 방향

민주화운동을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 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는 활동과 관련하여 정의할 때, 민주화운동사 서술의 시작점은 그 전제가 될 헌법적 가치의 확인이라야 한다. 그리고 오늘을 서술의 종점으로 삼아야 한다. 교과서 속의 오늘은 물리적 시간으로서 오늘이면서, 그것은 독자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내일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민주화운동의 역사가 학생들을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데 주안점을 둔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그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미래를 열린 존재로 받아들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 수립에서 현재에 이르는 시기의 민주주의·민주화운동의 역사가 교과서에 기술된 현황을 분석하면서 다음 네 가지 주안점을 염두에 두었다.

첫째, 민주주의·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의 원천이라 할 헌법의 역사성을 충실히 다루었는가이다. 그러나 현행 역사교과서는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공화국의 가치에 대하여 대다수 교과서가 충실하게 기술하지 않았다.

헌법적 가치야말로 48년 이후 진행된 역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유일한 준거가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헌법적 가치를 올바르게 다룰 수 있을 때, 권력을 쥔 자들이 시류에 영합하면서 혹은 치부를 은폐하기 위해 내놓은 정치적 수사에 현혹되지 않고, 역사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준거를 세울 수 있다. 민주공화국으로 대한민국이 탄생한 시점을 1919년으로 잡을 때, 민주화운동이란 개념, 혹은 민주주의 역사의 시작점 역시 이때로 소급하고 임시헌장부터 논의할 수 있겠다.

둘째, 6월 항쟁 이후 역사를 제대로 다루었는지를 비중 있게 검토하려 하였다. 6월

항쟁이 가져온 변화는 대통령 직선제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6월 항쟁을 계기로 새로운 헌법의 제정, 직선제 대선과 여소야대를 탄생시킨 총선을 거치면서 국가의 재구성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 무렵은 3저 호황을 계기로 한국경제가 한 단계 도약을 이루었으며, 민중운동의 조직화와 시민운동의 폭발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6월 항쟁 이후 벌써 30년이 흘렀다. 체제경쟁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추구하던 시기와, 남북이 서로 마주보며 대화하기 시작하고 시민사회의 성장 위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일정하게 보장된 상황이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기존 교과서들은 한국전쟁 시기까지를 시간 순서대로 기술한 이후에는 그 이후 60여년의 역사를 하나의 시기로 설정하고 분류사별로 접근한다. 민주주의·민주화운동사의 관점에서 이 시기를 어떻게 형상화할지 성찰하고 이를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의 서술 경향을 분석하였다.

셋째, 그 동안 충실하게 기술되지 않았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특히 훼손된 독재와 인권침해의 역사를 제대로 다루었는지 비중 있게 검토하려 하였다. ‘독재와 인권침해란 어두운 역사를 꼭 배워야 하나? ... 그것도 어린 학생들이...’와 같은 문제 제기도 종종 있다. 실제로 그런 이유를 내걸어서 그 동안의 교과서들이 독재나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역사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독재에 의한 헌정유린과 인권침해의 역사를 민주화운동사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민주개혁을 헌법적 가치로 삼고 민주시민교육을 다짐하는 나라라면 마땅히 이같은 역사를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한다.

넷째, 실제 민주화운동을 분석함에 있어, 운동의 주체를 온전히 드러내고 그들의 목소리를 되살리기 위해 애썼는지 살펴보았다. 막연하게 국민 혹은 시민으로 호명하지 않아야 하며, 국민 혹은 시민 중 누가 어떤 식으로 싸웠는지, 그 반대편에는 누가 있었는지 등을 보여주어야 한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국가권력의 집행자들이 있었던 만큼, 항거의 주체가 집합적 주체로서 국민이나 시민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직업적인 민주화 투사가 한 역할도 크지만, 대다수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은 우리가 이웃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평범한 개인들이었다. 항거의 주체들이 화석화된 사건 혹은 건조한 조직의 명칭으로, 혹은 숫자로만 등장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생을 민주화운동에 바친 이들과 민주화운동 과정의 희생자를 마땅히 기억하고 추모해야 하겠지만, 평범한 개인 참여자들을 등장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민주화운동은 참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

어졌고, 또 끊임없이 이어졌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늘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연구팀은 이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모두 다섯 항목에 대한 교과서 서술을 분석하였다.

1. 대한민국정부수립과 제헌헌법
2. 이승만의 독재정치와 4월혁명
3. 박정희 독재정치와 민주화운동
4. 5.18민주화운동에서 6월민주항쟁까지
5. 6월민주항쟁 이후 민주주의·민주화운동의 역사

분석항목을 이렇게 의제화한 것은, 사건을 시대의 맥락 속에서 분석하고, 특히 민주화운동을 반독재 민주화운동 영역에 국한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민주주의·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술함에 있어 마땅히 독재-국가권력에 의한 헌정질서 유린과 인권침해의 역사를 온당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것이기도 하다.

04

역사교과서 분석 주요 내용

역사교과서는 2007·2009 교육과정의 초·중·고 교과서 전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과정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검정을 통과한 상당수 역사교과서가 - 좌편향 논란을 제기한 이들의 말과 전혀 상반되게도 - 헌법상의 민주공화국의 가치, 교육법 상의 민주시민양성이란 문제의식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반대 반향에서 편향성을 드러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⁵⁾ 이 글에서 세세한 부분을 다루기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2007·2009 교육과정 시기 교과서들 중 상당수에서 뉴라이트의 역사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기준을 마련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검정을 통과한 2009 교육과정 시기 교과서들, 그 중에서도 특히 초등 국정교과서에는 두 정권의 역사인식이 상당정도 드리워져 있다.

둘째, 심각하게 균형을 잃었다고 판단한 몇 가지 사례들이다.

- ▶ 초등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을 조사해보면, 이승만은 12회, 박정희 11회 나오는데, 김구는 2번 밖에 나오지 않고, 김영삼, 김대중 등은 한번도 나오지 않는다. 심지어 남북정상회담 사진을 실으면서도 그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 ▶ 5.16 군사정변과 3공화국을 다룬 단원 제목으로, ‘군인출신 대통령이 등장하다’(2007, 중학교 D출판사), ‘박정희 정부, 경제성장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다(2009, 중학교 S출판사)’라고 잡았다.
- ▶ 분석 대상인 초등 역사교과서 둘 다,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상당수

5) 연구팀은 연구를 종합함에 있어 우려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30여종 가까운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저자나 출판사에 따라 차이가 제법 있었다. 그리고 많은 저자들이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적 양심과 학문적 엄밀성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였던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아래와 같이 문제점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모든 검정교과서가 다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자칫 임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우리가 집중한 부분은 특정교과서가 아니라, 특정 서술과 그 맥락이었다. 앞의 세 연구(초·중·고 교과서 분석_필자주)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 서술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도 동시에 실었음을 밝힌다. 오래된 관행과 부당한 외압에서 벗어나 더 나은 검정교과서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연구진의 생각에 검정교과서 저자들의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

가 박정희 집권기를 서술하면서 독재란 용어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 ▶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2007 초등)’이라고 쓴 부분을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된(2009 초등)’으로 바꾸어 서술함으로써 전두환이 마치 정당하게 대통령이 된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 ▶ 대다수 교과서들이 6.29 선언을 6.29 민주화선언으로 기술하고, 일부 교과서들은 6월항쟁보다 6.29 선언을 비중 있게 다룬다. 교육부가 편수용어집에서 6.29민주화 선언을 공식 용어로 채택한 결과다.

셋째, 헌법 제정과 정부 수립을 다루면서, 민주공화국이란 단어조차 언급하지 않은 교과서들이 여럿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나 민주적 정당성의 원천이라 할 제헌헌법을 제대로 다루지 않은 교과서가 적지 않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뉴라이트 인사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서술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추구하였다(2007, 중학교, D출판사)”, “6.25 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공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중심적 가치로 강조하였다.(2009. 중학교 S교과서)”는 사례는 그 중 일부다.

넷째,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한 독재의 역사를 충실하게 기술하지 않았다.

독재가 독재인 이유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상, 헌정질서 유린과 인권침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도 대단히 많다. 여러 교과서들이 이승만 시기를 서술하면서 독재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유독 박정희 집권기 역사를 기술하면서, 심지어 유신체제를 기술할 때조차 대다수 교과서들이 독재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다섯째, 역대 정부의 통치 행위를 기술한 부분과 비교할 때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은 서술량이 적고, 주변화되었다.

비교적 중요한 사실조차 기술되지 않고, 중요한 사건이라 해도 운동의 전개과정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략한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민주화운동의 역사는 망

각을 강요받거나 역사의 흐름에서 주변화되고 만다.

민주화운동을 서술하면서도, 항쟁주체를 중심으로 그들의 행동과 목소리를 중심으로 민주화운동이 갖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서술하기보다. 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나, 독재에 저항한 일로 기술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변명할 때 구사하는 논리가 은연 중에 스며든 경우도 있다.

여섯째, 민주화운동을 반독재투쟁으로 간주하고, 민주주의를 절차적 민주주의 혹은 정치영역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점은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발견된다.

민주화를 산업화와 별개로 간주하고, 산업화를 경제성장으로 간주하면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의 결과와 과정을 일방적으로 서술한다. 결과적으로 산업화 과정에 대한 성찰, 분배 문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사는 탈 맥락화된다.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노동조합이란 단어조차 사용되지 않으며, 심지어 경제성장이 자동적으로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어진다고나, 새마을 운동의 결과 농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느낌을 주는 곳도 있다. 민주화운동을 반독재민주화에 국한하다보니, 민주주의를 냉전 상황과 관련짓지 못한다거나,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 혹은 일상의 민주주의로 시야를 넓히기 어렵다. 민주화된 사회가 인권이 제도화된, 반공국가주의가 강요되지 않은 사회라 한다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인권의 개념이 확장되고 평화를 추구하려는 노력을 시야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일곱째, 6월 민주항쟁 이후를 다룬 부분은 어떤 논리나 체계가 없다 할 정도로 무질서하다. 이미 30년 넘는 시간이 흘렀고, 6월 항쟁 전과 후의 사회가 현저히 달랐음을 감안하면, 넘었으며, 그 기간은 는 시간이 흘렀으나, 그것을 형상화하여 교육적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토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덟째, 집필기준에서부터 비롯된 문제이지만, 민주화운동이나 민주주의 역사를 다루기에는 현재의 단원 구성방식이 심각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현대사에 대단히 적은 분량을 배정하는데서 비롯된 문제다. 가까운 시대 역사일수록 더 교육적 가치가 높다는 학계와 교육계의 합의가 무색할 정도로 현대사에 배정된 시수와 교과서 분량은 대

단히 적어, 교과서가 기본적인 사실을 설명하는데도 부족하다. 초등이 가장 심하여, 조선 시대를 다룬 교과서 분량의 절반 수준이다.

05

나오며 : 역사교과서 서술정책 제안

최근 여러 해 동안 근현대사 교과서 논란·교학사 교과서 논란이 이어졌고, 급기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중고등학교 검정 역사교과서와 초등 교과서 편찬 과정과 내용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핵심적으로 교육과정과 편찬기준이 역사학계와 교육계의 동의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중등 역사교과서는 엄격한 검정 절차 수정권고나 수정명령 남발 등으로, 초등 국정교과서는 국정이란 편찬 절차를 이유로, 역사교과서에는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와 어울리지 않으며 민주주의적 가치와 충돌하는 내용이 적지 않게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최근 역사교육계의 논의를 바탕으로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의 마무리를 위해 앞서 연구한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교과서 분석과 서술방향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을 소개한다. 이 제안내용은 사실관계의 오류 지적이 아니다. 그 것보다 좀더 본원적인 역사교과서 서술 정책에 관한 제안이다. 관계기관이 정책수립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다.

먼저, 편향된 역사 교과서 서술의 즉각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편향된 서술이 여러 역사교과서에서 발견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초등 국정교과서가 가장 심각하여 여러 곳에서 민주주의적 가치와 심각하게 충돌한다. 교과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고등학교 한국사, 중학교 역사 등 검정으로 발행되는 중등 교과서 중에도 문제점이 제법 많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이란 교육기본법의 이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현재 사용되는 중등 교과서와 초등 교과서의 서술 내용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교과서 저자와 상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역사교육과정과 편찬 기준이 재구성되어야 한다.

현재의 역사교과서는 민주화 운동사 서술의 비중이 매우 적을뿐더러 그마저 주변화·파편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헌정질서 파괴와 인권유린의 역사, 민주화운동사 서술 내용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편찬기준을 바꾸어야 한다. 나아가 민주화·민주주의를 정치적 차원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사회적 권리·연대와 단결의 권리 신장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 운동으로 확장하도록 한다.

셋째, 현대사 비중의 확대와 6월 항쟁 이후 역사를 독립된 단원으로 다루길 제안한다.

2017년은 해방된 지 72년이 되는 해다. 강화도 조약에서 해방에 이르는 기간보다 더 길다. 가까운 시대의 역사일수록 더 자세히 공부하는 것이 옳다는 학계의 지배적 견해도 불구하고, 초등에서는 시종일관 근현대사 비중이 적었고, 중등학교에서도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한국 사회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진 87년 전후의 큰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교육내용 구성방식을 변경하여야 한다. 민주화와 산업화가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80년대 후반 이후 벌써 30년이 넘는 역사를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적 관점의 역사교육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

넷째, 논쟁적 역사수업을 고려한 교과서 체제로 개선되어야 한다.

본질적으로 역사교육이 민주시민형성을 지향한다는 관점을 견지하되, 특정한 관점에서 학생을 교화하겠다는 관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과거에도 다양한 관점을 가진 자들이 경합하면서 역사를 이루었고, 현재에도 해석을 둘러싼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논쟁이 교실 내에서, 학생들의 삶과 관련지어 논의될 수 있을 때 민주시민교육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과서의 형태가 크게 달라져야 하고, 수업과 평가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교과서 체제를 발본적으로 개선하고, 평가와 수업의 변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다섯째, 초등 역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동안 초등 교과서들이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 현장의 수업실천이 가져온 교재관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데다가, 정치권력의 역사관을 노골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문제점이 대단히 심각하다. 실험본 단계에서부터 수많은 오류와 편향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완성본이 제출된 상태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냈던 현재의 교과서는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2018학년도부터는 학생들이 편향과 오류 없는 내용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초등 역사교과서의 국정제를 반대한다는 대통령 공약에 유의하여, 현재 진행되는 2015교육과정에 따른 국정교과서 개발 작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2017년은 국정교과서가 폐지되었고, 향후 역사교과서 교과과정과 향후 일정 등 정책수립이 진행되는 해이다. 민주주의·민주화운동의 역사인식의 프레임을 개선하고 새로운 역사교과서 방향을 설정할 시기이다.

참고문헌

-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7,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교과서 분석과 서술방향 연구결과서」

민주화운동 역사교과서에 어떻게 서술할까

: 역사교과서 서술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2017년 11월 1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빌딩 A동 6층

이 책자의 내용은 본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

본 연구소의 승인없이 전재 및 인용을 금함

